

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

이 글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발췌 편집한 것이다(편집자 주)

I. 전자상거래 추진전략

1. 전자상거래 세계적 동향 및 우리의 현황

- 세계경제는 정보기술(IT)과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이 진행중
 -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모든 경제활동에 보편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생성

- 미국,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

* 미국: Bill Clinton 대통령주도로 「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」 발표(97)

* 영국: Tony Blair 총리 주도로 「e-commerce@its.best.uk」발간(99)

-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준은 선진국과는 다소 격차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는 구축

법적기반·인프라: 기본법 제정,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

사회적 인식: 인터넷 사용자 1,000만명 돌파

시장 형성: 기업·소비자간 전자상거래 폭발적 성장

- 다만,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열기가 사이버몰 등 「기업-소비자간 전자상거래」에 집중되어
 -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고가 미흡하고,
 -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가 미진하며,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물류시스템도 취약

2.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

- 발전목표: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
 -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
 - 「기업간 전자상거래」를 경쟁력 제고의 실천전

략으로 활용

- 전산업분야에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확산하여 전자상거래 비중을 우리의 세계교역점유율(98년 2.1%) 수준으로 제고
 - 99년 0.8%, 21억불 → 2003년 2%, 200억불내외

□ 추진방안

-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핵심이 되는 5대 중점 시책을 선정하고 시책별 세부과제(총 40개)를 조속히 완료

- ①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 : 법·제도 정비 등 12개 과제
- ② 인프라 확충 : 초고속통신망, 기술개발, 인력양성 등 10개과제
- ③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: 정부조달·공기업의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
- ④ 산업부문간의 전자상거래 확산 : 시범산업 확대 등 6개과제
- 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 : 대외무역법 개정 등 7개과제

* 민관합동의 「전자거래정책협의회」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종합점검

□ 국민경제적 기대효과

-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·효율성·투명성 제고
 - 산업 및 공공부문에 2003년 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.8% 내외의 GDP 증대효과 기대
- 수직계열적 산업구조가 경쟁촉진적인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불가하락, 소비자 주권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II. 법·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

1. 전자상거래 법·제도 정비

□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

-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를 이달중 전면 시행
- 전자상거래시 취득한 개인정보의 오·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,
 -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거래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
 - 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·신뢰성 기준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(가칭) 제정 추진

□ 소비자보호 강화

- 금년 말까지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을 개정하여 환불제도 등을 강화하고,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비대면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
- 전자결제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·의무를 명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금년중에 제정하고, 향후 이를 발전시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
-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추진

□ 전자상거래 사업환경 개선

- 우선 금년중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,
 - 전자상거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

- 대면거래를 전제로 시행중인 각종 규제중 사이버몰의 설립, 운영, 대금결제 등 전자상거래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철폐

2.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

□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완성

- 금년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기간망을 구축하고,
 - 동영상급(1.5~2Mbps)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의 대폭 확충과 함께 무선통신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
 - 아울러,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도 2배 이상 대폭 확충하여 원활한 전자상거래 정보유통을 도모

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

- 수요는 크나 자금·기술력 부족 등으로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 등은 정부·민간이 공동 개발한 후 민간에 이전하여 실용화(2000~2002년간 총 643억원)
- 국제표준화기구(ISO) 등의 동향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(2000~2002년간 총 105억원)

□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

- 금년 상반기중 인력실태를 조사하고, 동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전자상거래관련 학과 신·증설을 유도하는 등 부족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금년부터 시행

□ 전자상거래 물류기반 확충

- 육상, 해운, 항공 등 물류망과 무역·통관·금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
-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택배 등 물류업체의 정보화를 지원(2000~2002년간 총 250억원)

III 산업 및 무역의 전자상거래 촉진

1.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

-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전체 전자상거래중 80%이상이 되는 등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나,
-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4~5년 뒤쳐진 99년부터 사업 착수

* 미국: 94년부터 자동차업계 Big3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
* 일본: 95년부터 전자, 자동차 등 10개산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

- 선진국 수준에 조속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공동노력 필요
-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 초기 단계에는 정부의 집중지원을 통해 조기 구축을 유도

□ 추진 방안

- 전자, 자동차 등 8개 주요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2002년까지 완료하고, 이를 토대로 전산업분야로 확산

* 8개 산업: 전자, 자동차, 조선, 철강, 중공업, 섬유, 전력, 유통

-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, Seed Money 성격의 정부지원을 확충(2000~2002년간 총 513억원 지원)

- 산자부내 「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」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
- 기업간 전자상거래 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「eCEO 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

2.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

- 최근 국내에서도 바이어 발굴, 수출입 상담 등 무역 업무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이버 무역이 급속히 확산
 -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없는 사이버 무역은 무역업체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
 - * (기존 무역거래) 출장상담, 서류 → (사이버무역) e-mail, 전자문서
-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흑자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이버무역 활성화가 시급
 -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마인드 및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지연
 -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이버무역에 대한 적응력 강화
- 추진 방안
 - 금년중 「대외무역법」을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개정하고, 수출입 단계별 「Cyber Trade Map」에 따라 애로요인 해결
 - 사이버무역의 근간이 되는 무역통관 업무의 전자화를 연차적으로 확대(99년 10% → 2002년 50%)
 - 인터넷 통합바이어발굴시스템(Silkroad 21)을 구축하여 One-Click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사이버무역 지원 거점으로 활용
 - WTO, OECD 등의 국제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·대응하고, 선진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도 강화

3.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기존 유통산업 대책

- 전자상거래가 자동차, 컴퓨터 등 상품 판매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주식거래, 보험, 여행 등의 서비스분야로도 확산
 -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제품판매(Direct Marketing)
 - * Dell사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판매로 미국 컴퓨터시장 2위 업체로 성장
 - 기존 유통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새로운 중개 전문업체(Intermediary)가 등장하고, 사이버 기업으로 전환 추세
 - * 출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Amazon.com의 미국내 서적판매시장 점유율 : (98년) 5% → (2000) 14%(전망)
- 이에 따라 기존 유통업은 신규 유통채널과의 병행 또는 위축과정을 거치면서 구조 및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
- 기존 유통산업 개선 대책
 - 산업별 유통채널 실태조사·분석 및 대응
 - 2000년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가 주요 산업별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
 - 기존 유통채널의 강점과 인터넷을 접목한 사이버(on-line)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유통업체 위축을 최소화
 - 기존 유통채널을 물류와 사후관리(A/S)의 거점으로 활용
 -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순조로운 직종전환 유도
 - 대한상의 등 유통 및 전자상거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유망직종의 정보 제공 강화 ☺

관련부처별 업무 및 세부추진과제

관 련 부 처	소관업무	세부추진과제 및 일정	관 련 부 처	소관업무	세부추진과제 및 일정
재정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자금이체 제도 정비 조달관련법령 정비 전자상거래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검토(계속) 정부조달관련 법령 개정(2000) 투자세역공제 등 지원방안도입(2000) - 기타 세제 지원방안 검토(계속) 	정보통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공공·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시행(2000. 상) 민간부문 암호이용제도 확립(계속)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(2000. 상)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(계속) 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(계속)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속추진(계속) 대학 등 인력양성 지원(계속) 공공부문 및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지원(계속)
외교통상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(계속) 	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보험 EDI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용 대상률 75%로 확대(2000) 의료보험 EDI 이용률 제고(계속)
법 무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법규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정비 지속 및 국제 규범의 국내수용 검토(계속) 	노동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(계속)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 시행(2000)
국 방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방 CALS/EC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방 CALS/EC 구축(2002년 완료) - 국방 조달EDI 전면시행(2001) 	건설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 CALS/EC 전자상거래 물류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CALS 구축완료(2005) - 조달EDI 전면시행(2003) 원활한 물류흐름 지원(계속)
교 육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과 신·증설 - 2001년 정원조정지침에 반영(2000) 	조 달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조달 전자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조달 전자화 추진(2001) 정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(2000)
문화관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적재산권 보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(계속) 	중소기업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사이버 무역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제작 지원(계속)
산업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정책 총괄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사이버무역 촉진 전자상거래 법·제도 정비 표준화 및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기업간거래 정보공유 추진 전자상거래 물류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정기 운영(계속) 산업 확대, 추진체제정비(2000. 상) 시범사업 완료(2002) 기존유통산업 개선(계속)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(2000) Cyber Trade Map 수립(2000. 상) 무역자동화 이용률 제고(계속) SilkRoad 21 구축완료(2000. 상) 및 매년 사이버상담회 개최(계속)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(계속) 분쟁조정위원회 본격가동(2000. 상) 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(계속) 기술개발, 표준화 지속 추진(계속) - 표준화 계획 수립(2000. 하) 인력수급 실태조사(2000. 상)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(2000)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(2002) 물류시범사업 추진 및 물류 인프라확충(계속) 	특 허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적재산권제도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(계속)
			기획예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기업 전자조달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조달 실태조사(2000. 상) 시스템 구축완료 : 선도공기업(3/4), 미실시 공기업(2000) 선도공기업의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% 수준으로 제고(2001)
			공정거래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-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(2000. 상)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(2000. 상) 방문판매법 개정(2000)